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10월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윤리

2026 October | vol.166

Brief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습 활용 배제(OPT-OUT), 대화 기록 삭제, 국외 이전 확인 등 정보 통제 방안 제시
2	생성형 AI 업무 활용 시 제 3 자 개인정보·미공개 업무정보 입력 관리, 승인된 AI 도구 사용 및 외부 연동 권한 최소화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필요
3	(사례) Zoom, 보안 수준 과장 논란 이후 암호화·보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AI 학습 데이터 보호 원칙과 이용자 통제 기능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 및 투명성 제고
4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 년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청렴윤리경영 우수기업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자율준수제도 개선 및 기업 지원 확대 추진
5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을 확정하고 공공성·투명성·책임성 등 6 대 핵심가치와 인간의 최종 책임·통제 원칙 제시
6	UNGC, 협력사의 ESG 성과와 AI 관리 수준을 입찰·계약조건에 반영하는 지속가능조달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공급망 전반의 책임경영 강화 방안 제시

목차

1	윤리 체크리스트	내 프롬프트 속 개인정보, 통제 가이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2026)		
2	사례 돋보기	AI 시대의 개인정보 투명성과 이용자 선택
ZOOM		
3	윤리, 지금	권익위 동향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주한외국기업과 소통 강화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 현장에 맞는 지원 계획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국내외 동향	미국, 반부패 감시기구 GRECO 탈퇴
국무총리, 토착비리·부정부패 근절 위한 무관용 원칙 강조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확정…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UNGC, 지속가능조달 프레임워크 공개, 계약에 ESG·AI 반영		
4	윤리 네컷	편리한 회의록, 남겨진 개인정보
5	행사	

내 프롬프트 속 개인정보, 통제 가이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2026.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AI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해와 자율적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8개 주요 질문으로 구성된 가이드를 발간함(2026.5).
-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이용·외부 연동 등 개인정보 처리 생애주기를 도식화하고, 데이터 학습 활용 배제(OPT-OUT), 대화 기록 삭제, 국외 이전 확인 등 이용자가 직접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업무 자료 및 제 3 자 개인정보 입력 시 AI 이용 지침·승인 절차 준수, 외부 연동 권한 최소화 및 개인정보 노출 시 대응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발간일 2026. 5.

01 무엇을 다루나요?

생성형 AI의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서비스 이용·외부 연동까지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전 과정을 살펴보고, 단계별 유의사항과 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데이터 수집

AI 학습

서비스 이용

외부 연동

02 이용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관리 방법

학습 활용 거부 (옵트아웃)

대화 기록 삭제

국외 이전 여부 확인

03 업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 자료 입력 시 유의사항

제3자 개인정보 입력 주의

조직의 AI 이용 지침과 승인 절차 준수

04 외부 서비스와 연동할 때는?

외부 연동 권한 관리

내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노출 시 대응 방법 숙지

05 8가지 질문으로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01 입력한 내용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나요?

02 AI 학습 활용을 거부(옵트아웃) 할 수 있나요?

03 대화 기록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04 내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나요?

05 업무 자료나 제3자 개인정보를 입력해도 되나요?

06 조직의 AI 이용 지침과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7 외부 서비스와 연동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08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5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 그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는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간되어 왔으나, 이번 가이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제작되었으며, 복잡한 법률·기술 설명을 덜어내고 일상에서 직접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가이드는 실제 민원 사례와 언론 보도, 해외 정책 동향 등을 참고해 주요 질문 8 가지를 선정하고,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정보주체 권리 분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가이드는 먼저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주요 단계를 생애주기 도식으로 제시한다. 데이터 수집과 사전·사후 학습 단계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학습에 활용될 수 있고,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는 입력 내용의 학습 활용 여부, 대화 기록의 저장·삭제, 국외 이전 가능성, 답변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외부 서비스와 연동해 이용자를 대신하여 일정 관리·메일·검색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AI 단계에서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되는 범위와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 담당자가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업무 자료 입력에 관한 다섯 번째 질문이다. 가이드는 고객·거래처·인사 정보 등 제 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AI 서비스에 입력할 경우, 사전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외부로 전달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조직의 AI 이용 지침과 승인된 도구·계정·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반출 승인 절차를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미공개 업무 정보나 계약 관련 자료 역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입력해서는 안 되며, 업무용 AI 서비스 이용 시에는 입력 내용의 학습 활용을 계약이나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업용 라이선스 사용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AI 답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유 중단, 증빙 확보, 기록 삭제, 연동 해제, 사업자 신고의 순서로 대응하고, 플러그인·에이전트 연동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한을 허용하며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면 연동 필요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공개된 정보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없으며,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4.7)가 적법 근거로 제시한 '정당한 이익' 요건(목적의 정당성, 필요성·상당성, 이익형량)을 충족하는 등 법적 요건과 안전조치가 갖춰져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생성형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이용되고 보관·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활용 여부와 범위를 관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가이드에서 제시한 8개 주요 질문과 실천법을 바탕으로, 업무상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정보 통제·보호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구성했다.

<기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생성형 AI 이용 개인정보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실천 과제	✓
학습 활용	임직원이 사용하는 AI 서비스의 입력 내용 학습 활용 여부와 데이터 학습 활용 배제(OPT-OUT) 설정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코드 등은 입력하지 않도록 정했는가?	☐
대화 기록 삭제	대화 기록 삭제 기능과 데이터 보관 정책(보관 기간·접근 범위)을 확인하고, 저장·히스토리 기본값을 점검하며 기기에 남은 파일도 삭제하도록 안내하는가?	☐
국외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국외 이전 여부, 이전 국가·항목·목적·보유기간·이전받는 자를 확인한 뒤 민감한 자료의 입력 여부를 결정하는가?	☐
입력 점검	입력 전 본인·가족·동료·고객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누적된 정보가 결합되면 식별될 수 있음을 교육하는가?	☐
업무 자료	조직의 AI 이용 지침과 승인된 도구·계정·환경을 정하고, 제 3자 개인정보와 미공개 업무 정보의 입력·반출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기업용 라이선스를 사용하는가?	☐
답변 대응	AI 답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공유 중단 → 증빙 확보 → 기록 삭제 → 연동 해제 → 사업자 신고로 이어지는 대응 절차를 마련했는가?	☐
외부 연동	플러그인·에이전트 연동 시 기능별·권한별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연결하고,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 연동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는가?	☐
공개 정보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AI 학습에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게시물의 공개 범위와 삭제·비공개 설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AI 학습 제외 신청 또는 크롤러 접근 제한 조치를 안내하는가?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2026.5) 및 보도자료 (2026.5.19)]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2026.5\)](#)

AI 시대의 개인정보 투명성과 이용자 선택

사례기업: ZOOM

핵심 키워드: #보안 투명성 #지속적 보안 개선 #이용자 통제권

- (보안 논란) Zoom 은 실제 보안 수준과 다른 암호화 방식 안내 및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지적을 받음.
- (보안체계 개선) ‘90 일 보안 계획’을 통해 암호화 기술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FTC 합의에 따라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받음.
- (AI 개인정보 보호) 고객 콘텐츠의 AI 모델 학습 미사용 원칙을 명시하고, AI 기능 고지·통제 및 데이터 보관 관리 기능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강화.



ZOOM

Zoom은 2011년 설립된 미국의 화상회의협업 플랫폼 기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회의가 급증한 2020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수준을 실제보다 과장해 안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Zoom은 2016년부터 회의에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적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회사가 암호화 키를 보유해 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암호화 수준도 광고와 달랐다. 또한 클라우드 녹화 파일을 최대 60일간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2018년에는 Mac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사파리(Safari)의 보안 기능을 우회하는 웹서버를 설치한 사실도 지적됐다.

Zoom은 보안 논란에 대응해 2020년 4월 '90일 보안 계획'을 발표하고, 암호화 수준을 강화한 Zoom 5.0 출시와 회의 암호, 대기실 기본 적용 등 100개 이상의 보안·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개선 현황 공개와 이용자 소통을 통해 투명성 강화에도 힘썼다.

한편 FTC는 Zoom의 기존 보안 관행이 이용자에게 실제 보호 수준을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21년 2월 최종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Zoom은 종합적인 정보보안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 보안 취약점 점검, 독립적인 제3자의 2년 주기 보안 평가 및 데이터 침해 발생 시 FTC 통지 등의 의무를 부과받았다. 이는 기술적 보안 조치뿐 아니라 지속적인 보안 관리와 검증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후 2023년에는 AI 서비스 약관을 둘러싸고 고객 데이터의 AI 학습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Zoom은 같은 해 8월 약관을 개정해 고객의 음성·영상·채팅·화면 공유 등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자사 또는 제3자의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Zoom은 공식 AI 백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 정책을 구체화했다. 조직 관리자가 AI 기능의 사용 여부와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참여자에게 AI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안내하며 기능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AI 회의 요약에 사용되는 대화록의 보관을 최소화하는 설정과 개인정보·민감정보 가림 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등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이용자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Zoom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이 안내하는 보안 수준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해야 하며,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AI 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신뢰와 책임경영을 위한 핵심 윤리 원칙임을 시사한다.

<Zoom의 주요 AI 개인정보 보호 정책>

구분	주요 내용
AI 학습 데이터 보호	고객의 음성·영상·채팅 등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명시
AI 기능 통제	관리자의 AI 기능 사용 여부 및 접근 권한 설정 지원
이용자 고지	AI 기능 활성화 표시 및 회의 참여자의 기능 중단 요청 지원
데이터 보관 관리	AI 회의 요약에 사용되는 대화록의 미보관 설정 제공
민감정보 보호	일부 개인정보·민감정보 가림 처리 기능 제공

[출처: ZOOM 홈페이지]

참고

[FTC, "FTC Requires Zoom to Enhance its Security Practices as Part of Settlement\(2020.11.9\)"](#)

[FTC, "FTC Gives Final Approval to Settlement with Zoom over Allegations the Company Misled Consumers about Its Data Security Practices"\(2021.2.1\)](#)

[ZOOM Blog, CEO Report: 90 Days Done, What's Next for Zoom](#)
[ZOOM Blog, How Zoom's terms of service and practices apply to AI features](#)

[ZOOM Blog, A Message to Our Users](#)
<https://www.zoom.com/en/blog/a-message-to-our-users/>

[ZOOM 홈페이지-Zoom AI Whitepaper](#)

[ZOOM 홈페이지-Administrative Controls](#)

[ZOOM 홈페이지-User Transparency and Notice](#)

권익위 동향

권익위 활동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약 2만 4천 개 공공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5년 위반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인 1,280건을 기록하고 제재인원도 340명으로 전년 대비 23.8% 감소했다고 밝혔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율은 97.8%로 나타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25년 위반신고 중 위반신고의 75.1%, 제재인원의 95.3%를 차지해 관련 교육과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1%가 청탁금지법 시행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금품등 수수 위반 및 처벌 사례를 집중적으로 전파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9월 28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9071

주한외국기업과 소통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기업의 애로사항과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독일·영국·일본·중국 등 10개국 상공회의소 임원들로부터 국내 기업활동 과정에서 겪는 주요 고충을 청취하고,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외국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와 제도적 어려움을 정책 개선으로 연결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9월 30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9253

권익위 정책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 현장에 맞는 지원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10월 13일과 15일 청렴윤리경영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렴윤리경영 유공 포상을 받은 대화제약, 한화오션, 노루홀딩스가 참여해 부패위험 관리와 윤리경영 운영 경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대화제약은 경영진 주도의 윤리경영과 이해관계자 소통, 한화오션은 직급별 교육과 윤리상담 창구 운영, 노루홀딩스는 그룹 공통 윤리원칙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 점검·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실천 기준을 정비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10월 13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9833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분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부정수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환수액은 약 5배(5.6억 원→29.4억 원), 환수처분 건수는 약 11배(129건→1,41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고 대상은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 및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부정수급, 주민지원기금 허위 신청, 환경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이다. 신고는 청렴포털,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비밀보장과 신분보호 등의 제도가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를 통해 환경분야 정부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부정수급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10월 1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9344

국내외 동향

반부패 정책

미국, 유럽평의회 반부패 감시기구 GRECO 탈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럽평의회 산하 감시기구인 반부패국가연합(GRECO)에서 탈퇴했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기구 부담금 납부보다 비자 제한, 제재, 해외 부패 수사 지원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반부패 수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GRECO는 1999년 설립된 국제 반부패 감시기구로, 회원국의 반부패 기준 이행 여부를 상호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미국은 2000년부터 참여했으며, 2023년 평가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포괄적인 반부패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한 10개 개선사항을 권고받았다. 유럽평의회는 미국이 GRECO의 주요 기여국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부패 예방과 청렴성 강화, 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협력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 The Guardian 2026년 9월 30일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6/sep/30/trump-greco-anticorruption>

국무총리, 토착비리·부정부패 근절 위한 무관용 원칙 강조

국무총리는 공직자와 민간기업, 브로커 간 유착으로 발생하는 토착비리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9월 말까지 금품수수, 인허가 특혜 등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2,107명을 적발하고, 863명을 송치하고 27명을 구속했다. 또한 경찰 전담수사 인력을 1,355명에서 1,839명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 과제로 지정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약 40억 원을 보전하는 등 부당이익 환수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사업 계약 및 인허가 과정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주민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2026년 10월 1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4080600001?input=1195m>

ESG/AI 윤리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확정...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AI 활용 확대에 따른 편향된 의사결정과 개인정보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기준은 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핵심가치와 68개 자율점검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복지대상자 선정, 인허가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에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AI의 판단을 사람이 검토·개입할 수 있는 감독 체계와 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 AI 활용 수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응용·융합' 3단계 자율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 쟁점을 반영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2026년 10월 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1171400530?input=119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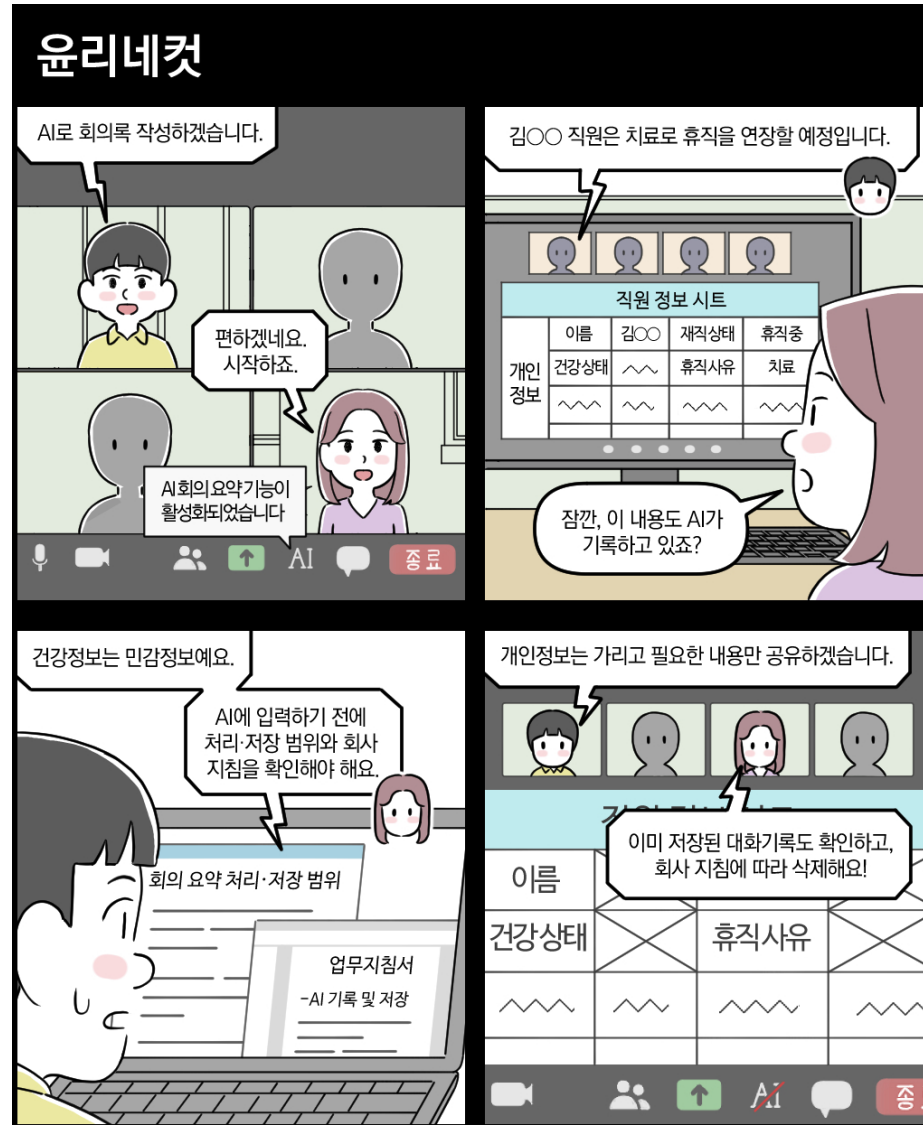
UNGC, 지속가능조달 프레임워크 공개, 계약에 ESG·AI 반영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협력사의 ESG 성과와 AI 관리 수준을 입찰·계약조건에 반영하는 '지속가능조달 실행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프레임워크는 제품 탄소발자국(PCF), 탄소감축 목표, 재생에너지·재생원료 사용 실적 등을 협력사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우수 협력사에는 가격·구매물량·계약기간 등에서 우대조건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AI 활용 여부와 관리체계, 보안·사고 대응 수준을 심사 항목에 포함하고, AI 평가 결과에 대한 사람의 검토와 설명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ESG와 책임 있는 AI 활용을 협력사 선정부터 계약 이행·평가까지 조달 전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임팩트온 2026년 9월 29일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0060>

편리한 회의록, 남겨진 개인정보



2026 동남권 ESG포럼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ESG 경영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략, 친환경 해양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공유하는 국제포럼.

- 주최: KNN, 국제ESG협회
- 일정: 2026년 11월 18일(수)
- 장소: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그랜드볼룸
- 참고: <https://www.withesg.kr/index.php>

The 22nd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

“청렴의 힘을 일깨우다(Igniting the Power of Integrity)”를 주제로, 전 세계 정부·기업·시민사회 및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반부패 회의.

- 주최: 국제반부패회의 운영위원회(IACC)·국제투명성기구(TI)
- 일정: 2026년 12월 1일(화)~ 12월 4일(금)
- 참고: <https://iaccseries.org/iacc-2026/plan-your-trip/registration-2026/>

독자 퀴즈

※퀴즈 정답자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독자의견은 이메일/퀴즈 응모 폼의 의견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 Q. 다음 중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 ① 서비스의 로고
- ② 서비스의 인기 순위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
- ④ 서비스의 화면 디자인

응모하기 <https://quiz.assist.ac.kr>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1) '응모하기' 페이지에서 응답하시거나

(2)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 앞으로

의견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기프트콘 당첨자 안내

송○훈님, 송○종님, 이○훈님, 김○숙님, 전○덕님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응답

★ 국민권익위에 문의하세요 ★

윤리경영 업무 중 궁금했던 제도·해석 사항이 있다면 독자 의견과 동일한 경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취합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부패·공익신고는 ▶ 청렴포털 www.clean.go.kr

- ① 부패·공익신고 상담 및 안내
- ② 부패·공익 침해 행위 신고
- ③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청
- ④ 신고 및 신청사건 결과조회